

Online Series

2014. 9. 16. | CO 14-13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개혁 전략

조정아(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지난 9월 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10년 만에 열린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발표된 이 담화문에서는 북한의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김정은시대 교육개혁의 방향과 당면과제가 제시되었다. 이 담화문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새 세기 교육 혁명’의 목표를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을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관건은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입장과 안목에서” 세계적인 교육 발전 경험을 수용하여 교육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교육개혁 방향으로 첫째, 교육체계의 완비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개선, 둘째,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셋째, 교육 조건과 환경의 근본적 혁신을 제시하고, 관련 과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첫 번째 교육개혁 방향으로 제시된 교육체계 및 지도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중등 일반교육 강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수재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중등교육기관에서 공교육비의 학부모 부담 전가로 인한 출석률 저하와 취약계층

학생들의 공교육망 이탈, 학업의욕 저하 등의 현상이 만연하고 교육이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2012년 9월에 발표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연계된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종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학제개편 이전의 기본 학제는 4-6-4제로, 4년간의 초등교육, 6년간의 중등교육, 4~6년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학제가 2012년의 학제개편으로 인해 5-6(3-3)-4제로 바뀌었고, 중등교육은 전기중등교육기관인 초급중학교와 후기중등교육기관인 고급 중학교로 분리되어 5년간의 초등교육, 3년간의 전기중등교육, 3년간의 후기중등교육, 4~6년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소학교 교육기간 연장은 201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 안에 종료하고, 중학교를 두 단계로 분리하는 것은 2013학년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학제 개정은 초등교육 기간 연장을 통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초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을 분리함으로써 중등교육을 강화하고 후기중등교육에서 산업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담화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중등일반교육의 교육과정을 자체 실정과 세계적 발전추세에 맞도록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등일반교육에서 수재교육에 힘을 넣으면서도 일반교육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체계를 보강하고 모든 학생들의 평생학습 기초를 다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은 2000년대 이후 수월성교육에 초점이 두어졌던 교육정책 방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현행 고등교육체계가 ‘공업경제시대’의 교육체계로서 제한성을 갖는다는 평가 하에, ‘학술형 인재’와 ‘실천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과 대학원을 연계하는 ‘연속 고등 교육체계’의 발전과 대학원에 해당하는 ‘박사원’의 증설, 학사, 석사, 박사학위 제도 도입 연구, 종합대학 증설, 전문학교의 대학으로의 통폐합 및 직업기술대학으로의 전환 등이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김정은 제1비서가 2013년에 현지지도를 하면서 명예 총장을 자청한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부문별, 지역별로 주요 대학들을

종합대학화하여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융합된 체제로 개편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 북한의 고등교육 체계는 좁은 전공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단과대학 중심의 구조로, 담화에서 지적된 학위제도, 교육과정, 대학 규모 등의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측면들을 연구를 거쳐 개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직업기술교육에 관해서는 공장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교육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평가 하에, 이를 대학의 규모를 늘리고 교육수준을 높이며 원격교육체계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직업기술대학 체계를 확립하여 실천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기능공학교도 정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교육체계 정비와 함께 교육행정관리에서 도, 시, 군 정권기관의 역할 제고와 학생관리, 교원 관리 강화를 주문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구와 시험단계를 거쳐 학점제에 의한 교수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학은 학점제가 아니라 학년별로 수강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학년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학년 승급과 유급, 선수과목과 후속과목 등을 학년제와 유사하게 통제하면서 부분적으로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학년 학점제를 도입하였다. 이번 담화는 이를 더욱 확대하거나, 과도기적인 학년 학점제를 완전한 학점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인다. 대학입학제도 개선 지시는 경제난 이후 입시비리가 만연함에 따라 입학생의 수준과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2013년 4월에 “웬만한 실력을 가지면 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그릇된 관점을 없애고 대학입학기준을 높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전국가적 대학입학시험문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여, 원리적인 인식과 응용능력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문제 출제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담화에서는 두 번째 개혁 방향으로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교육내용 편성 방침으로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편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졌다. ‘지식경제 시대’의

교육은 지식 전수가 아니라 “더 빨리 알고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대학교육의 교육내용 개편 방향으로는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간의 연계 강화, 최신 과학기술 성과 반영, 실험, 실습, 기능훈련 비중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방법 측면에서는 교육방법이 아직도 지식전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과 교수형태를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 개선도 과제로 제시하였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이외에, 교육연구 강화, 교육연구기관 통합 및 역할 제고, 교육연구 역량 보강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특히 교육연구에 있어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하여 선진적인 경험들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수준’, ‘세계적 교육 발전 추세’에 대한 언급은 김정은 제1비서의 첫 노작이라고 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도, 12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최고 인민회의 법령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에도 교육의 세계적 추세에 대해 해설하고 이에 기반해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였으며, 이중 의무교육 연장, 중등교육 직업화, 통합형 교육 과정 도입, 교육방법 개선 등 많은 부분이 2012년 학제개정과 그에 따른 중등교육과정 개편, 고등교육 체계 개선 과정에 반영되었다. 세계적 교육 추세에 대한 이해와 이에 입각한 제도 개선 노력은 김정은시대 교육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개혁 방향인 교육조건 및 교육환경 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 조성, 교육 관련법 정비, 교육 투자 증대, 교원 양성 및 재교육 강화, 교육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조성 측면에서 본보기 학교 건설,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 현대화, 교실의 다기능화, 교수와 실험 실습 과정 정보화,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다. 교육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집행 규율을 강화하고 학제개편에 따라 개정된 교육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중등일반교육 부문의 투자를 ‘제한없이’ 할 것을 지시하였다. 부족한 학교, 교실, 기숙사 건설과 낡은 교사 보수,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교복, 교육기자재 보장을 지시하고, 특히 교과서용 종이 확보 대책 마련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학제개정으로 의무교육 연한이 확대되고 중등교육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 북한 교육계의 당면과제임을 보여준다.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의무교육기간 연장과 중등 교육기관 분리에 따른 교원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담화에서는 교원 양성, 배치, 재교육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원 양성 측면에서는 그간 주로 과학기술계통 대학에 진학하였던 중등수재교육기관 학생들을 비롯한 우수 학생들을 사범대학, 교원대학에 우선적으로 진학시켜 교원으로 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지역 특성에 맞게 다과목 교원을 양성하고, 사범대학, 교원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도 교원으로 배치하여 중등일반교육부문 교원역량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교원 재교육을 통한 교원 수준 향상과 교원들의 사업조건 및 생활조건 보장, 교원 우대 풍토 조성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사업을 외면하고 교육강령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들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을 촉구하고 도, 시, 군당위원회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교육일꾼대회 담화문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북한 교육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염두에 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개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 수행의 ‘기본고리’라고 언급된 중등일반교육의 정상화 및 12년제 의무교육 제도의 안착과, 구체적 개혁 과제로 제시된 대학원 확대, 석박사 학위제도 연구, 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 개선, 대학의 종합대학화 및 전문학교 통폐합, 직업기술교육기관 및 원격교육 확대 등 고등교육제도 개편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2011년에 제정된 보통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후속으로 교육관련법 제·개정 작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등교육제도 개편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조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교육개혁의 귀추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개혁이 목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시설 및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및 생활조건 보장, 교육정보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하나, 별도의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시, 군 단위의 ‘모범교육군칭호 쟁취운동’과 같은 전국가적 동원이나 국제적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최근 일이년간 관광과 체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북한의 국제적 교류협력사업이 교육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 부문의 국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에 신설한 ‘조선교육후원기금’을 창구로 하여, UNESCO를 비롯한 국제단체와 NGO,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후원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엄격히 통제되는 과도한 정치사상교육은 ‘지식 경제시대’에 맞는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교육 분야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세계화’와 이를 통한 인재 양성, 경제 발전을 모색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